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218조... 물류·IT분야 의존도 높아

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총 비중 11.6%... 전년비 소폭 증가
상위 10개 대기업서 155조9000억
총수 2세 지분 많을수록 비중 커

지난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이 21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았으며, 총수일가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218조원, 내부거래 비중은 11.6%로 전년(11.4%)대비 소폭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 보면, 전년(183조5000억원) 대비 18.8%(34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경제규모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보다 높았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체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다만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은 지속됐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고, 총수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이었다. 전년대비 규제대상 회사수가 크게 증가해 내부거래 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2.4%) 감소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8조원) 중 대다수(91.1%)가 수익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익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다.

올해 처음 분석·공개된 물류·서비스 분야 내부거래의 경우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익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물류 부문 내부매출 비중은 49.6%, 내부매입 비중은 49.8%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내부매출 비중은 68.3%, 내부매입 비중은 57.1%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물류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쿠팡, 농협, 한라, 하이트진로, 농심 순이었다. 내부매출 금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엘지, 쿠팡,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순이었다.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쿠팡이었다. 내부매출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롯데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회 소속 공익법인 간 내부거래는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사내급식 제공, 부동산 임차거래 등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 등 거래구조, 영위 업종 특성, 거래 비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익계약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지속 분석·제공해 시장의 활발한 자율감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중소 미래비전 상징 조형물' 설치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60년 역사를 기념하고 100년의 미래비전을 담은 조형물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정문에 설치했다. 제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LX홀딩스, 경영개발원 'LX MDI' 설립

LX홀딩스가 그룹 차원의 미래 준비를 위해 지분 100%를 출자해 LX MDI를 설립했다.

1일 LX홀딩스에 따르면 LX MDI(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는 그룹 계열사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컨설팅, IT·업무 인프라 혁신, 미래 인재 육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아울러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LX MDI는 중장기적으로 사업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MI(Market Intelligence) 기능을 강화해 고객과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룹의

사업 방향과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날 열린 LX MDI 이사회에서 구형모 LX홀딩스 경영기획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 서동현 LX판토스 경영진단·개선담당과 함께 각자 대표 이사로 선임됐다.

LX홀딩스 관계자는 "LX MDI는 계열사의 사업 경쟁력과 조직 내부역량 제고를 통해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준비를 주도하는 주요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기업 86%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 부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6.2%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73.4%는 '다소 부담', 12.8%는 '매우 부담'이라고 응답했고, '부담없음'은 13.8%에 그쳤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률 90%이상'을 목표로 수립하고, '탈플라스틱'(50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30년 30%),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27년)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기업들은 "순환경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보다 정책목표가 앞서고 있다"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 확대" 등과 같은 세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원료·공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순환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인식은 엇갈렸다.

대한상의 '순환경제 정책' 설문

대부분 정책 취지엔 공감대
93.4% 순환경제 사업 추진
인센티브 등 규제 개선 필요



/유투이미지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 동참이 필요하다'(51.0%)는 응답과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8.9%)라는 응답이 59.9%에 달해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기업보다 우선돼야 한다'(20.7%)는 응답과 '과도한 규제가 포함돼 기업활동이 저해될까 우려된다'(19.4%)는 부정적인 응답도 40.1%에 달했다.

응답기업의 93.4%는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계획이 있는 기업은 2.6%, 추진계획이 없는 기업은 4.0%에 불과했다.

순환경제 사업 유형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사업장 관리'가 67.5%로 가장 많았고, 제품 수명 연장, 중고부품 재생 등 '재사용'(24.3%), 폐자원 '재활용'(16.4%), 대체소재 사용 등 '친환경제품 개발'(15.4%), '제품 공유 및 서비스'(2.4%)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폐자원의 가치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폐배터리·폐플라스틱 등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사업장 관리

부터 제품화까지 순환경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양질의 폐자원을 조달하기 어려워 수거, 선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D사 관계자는 "전기차 폐배터리는 반납, 분리, 보관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반면, 노트북, 핸드폰 등에 내장된 가정용 2차 배터리는 관련 규정이 없어 리튬·니켈·코발트 등 금속 회수가 가능한 배터리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정용 2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수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홍보와 지자체 관리를 강화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향후 10년내 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재활용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와 기술 개발, 폐자원 확보 인프라가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에 동참의지가 높지만 목표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순환경제 사업에 대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